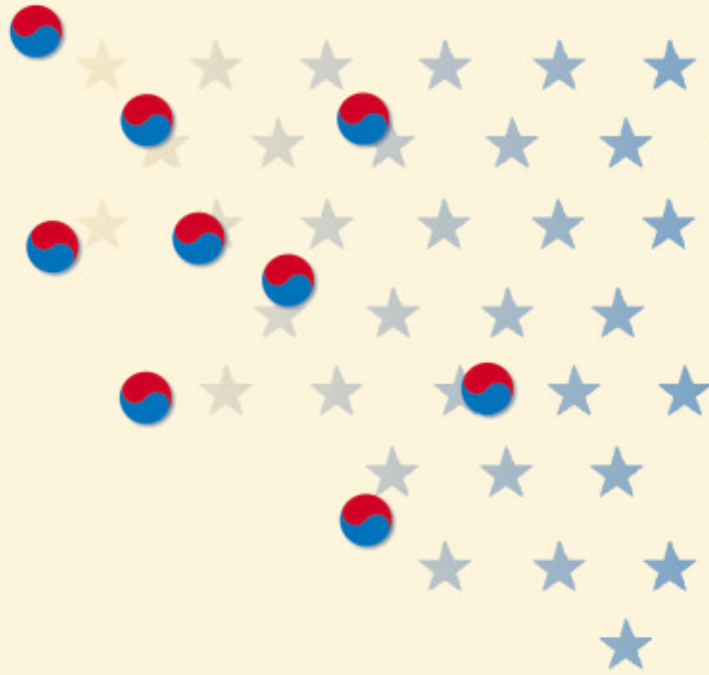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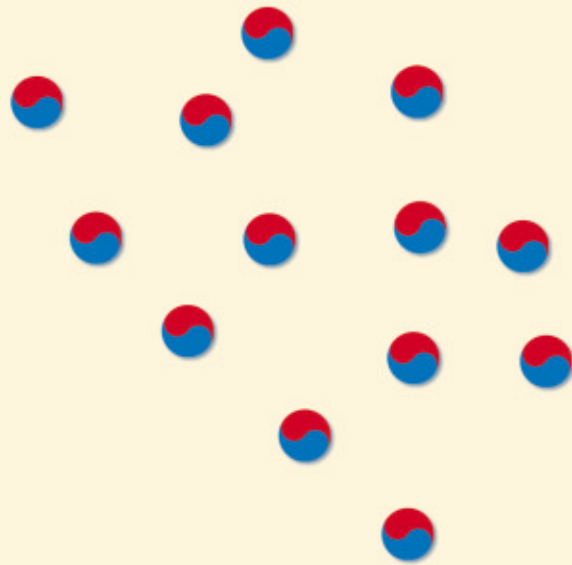


한미 FTA를 말한다



한미 FTA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

한미 FTA를 말한다

발행처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 www.news.go.kr

발행인 김창호

발행일 2006년 5월 26일

편집협력 김형윤편집회사

인쇄제본 (주)이룸프레스

발간등록번호 11-1110050-000079-01

배포문의

국정홍보처 간행물팀(02-2100-2987~8)

내용문의

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02-2110-2570~5)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02-2100-6570~3)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02-2100-8120)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 FTA팀(02-2110-3833)

법무부 국제법무과(02-503-9505)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2)

농림부 국제협력과(02-500-1715)

산업자원부 자유무역협정팀(02-2110-5392~3)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02-750-1481)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02-2110-6007)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02-2110-6564)

노동부 국제협상팀(02-2110-7046)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 한미FTA협상반(02-3674-6940)

☎ 한미 FTA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www.fta.go.kr 또는 <http://fta.daum.net>을 방문해 보세요

차례

● 변화 - 주도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 한덕수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4

I. 왜 한미 FTA인가? 11

1. FTA, 왜 필요한가? 12
2. 왜 미국인가? 18
3. 한미 FTA 비판론의 문제점 21

II. 한국 경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27

1. 대미 수출 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 28
참고 |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어떻게 달라졌나? | 30
2.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32
3. 한미 FTA 효과, 과연 과장됐나? 35

III. 분야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43

1. 제조업 -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 44
참고 | 한미 FTA 제조업 관세인하 · 철폐 효과없다? | 50
참고 | FTA 피해업체, 어떻게 지원받나? | 52
2. 농 · 수 · 축산업 -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54
참고 | 한미 FTA 농업 피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58
3. 서비스업 - 개방과 경쟁으로 생산성 제고 59
참고 | 한 · 칠레 FTA 2년, 무엇을 남겼나? | 66

IV. 한미 FTA,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71

● 인기가수 '비'가 뉴욕에 간 까닭은? - 이백만 | 청와대 홍보수석 76



한미 FTA,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

한덕수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어떤 선택에 앞서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 본다. 그것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따져 보는 부분이 많을수록, 고민이 깊을수록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이 일을 준비해 왔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진행하면서도 늘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심사숙고의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타이밍이다. 신중함의 미덕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때를 놓쳐 버리면 그 신중함마저 소용없는 일이 된다. 실기는 실패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교훈을 주기도 하고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곤 하지만,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때늦은 행동은 고스란히 내일의 짐으로 되돌아온다. 풍량이 두려워 항해를 포기한 사람은 대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다. 더구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결코 느낄 수 없다.

한미 FTA는 분명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기대되는 이득이 크지만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득실을 따지는 일과 더불어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근대화와 개혁의 시기를 놓쳐 겪어야만 했던 실수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방이 되면 이런저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과 세계화라는 이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잠시만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의 저가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유럽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고급 승용차의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우수 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금융기관 중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거의 없다. 의료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중국·동남아의 유명 병원으로 휴양차 떠나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더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미국으로, 호주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겠는가?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려 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다.

FTA, 21세기 생존전략

이미 세계는 FTA라는 국가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세계 무역에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역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만도 180건, 그중 60%가 넘는 120건이 WTO 출범 이후인 1990년대 후반 체결된 것이다.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들은 FTA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앞다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다.

특히, FTA의 확산은 국가의 대소나 발전단계에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과 일본도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도 역내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역외 국가와의 FTA 체결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경제통합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면서 지역주의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까지 품에 안아 회원국 수를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렸고,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싱가포르·칠레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은 이미 FTA 허브를 자처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

대외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개방과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 FTA 미체결 국가로서 받아야만 하는 불이익은 이미 오늘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품 수출을 비교해 보자.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2.5%이다. 그러나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부품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된다. 2.5%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난 2003년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수출실적은 195억 달러이다. 15억 달러를 겨우 넘긴 한국의 수출액에 비하면 무려 12.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2005년 멕시코와 일본은 EPA(경제연계협정)라는 이름의 FTA를 발효시켰고, 일본산 자동차의 무관세 쿼터는 3만대에서 5만대로 확대되었다. 이제 몇 년 뒤면 일본산 자동차는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수출된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는 멕시코 시장에서 50%의 관세를 계속 물어야 한다. 결국 1억 인구를 가진 멕시코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은 FTA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FTA가 21세기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 ASEAN 9개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과 동시에 협상을 벌이며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미국과의 FTA인가?

혹자는 FTA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ASEAN도 있는데 왜 하필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다. 그것도 무역촉진권한(TPA : Fast Track Authority)의 시한이라는 남의 나라 일정에 맞춰 쫓기듯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미국과의 FTA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드러난다.

미국은 금액규모로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일본·중국·ASEAN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가 미국이고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를 나는 소위 최대 'Test Market'이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야 진정한 강국이 된다. 우리는 미국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인도 등 신흥

대국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995년 3.3%에서 2005년에는 2.6%까지 떨어졌다. 수출증가율 감소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는 2004년에 비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각각 23.8%, 20.9% 늘렸다. 일본도 6% 이상 수출을 늘렸고 대만은 현상유지(0.6%)라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2%나 감소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미국 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관세를 1%만 낮춰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그만큼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한미 FTA는 이런 하락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보유국의 노하우를 얻어낼 호기이다.

더구나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 시장의 진출 거점을 한국으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다. 이는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미국의 협력 없이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만의 강점과 인프라를 국제수준의 개방된 시스템과 접목시킬 때 진정한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혹자는 한미 FTA를 두고 미국의 TPA 만료시점에 쫓겨 막차를 탄 협상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뒤늦게 미국과 FTA를 추진기로 한 말레이시아도, 다자협상인 DDA 협상도 TPA 시한과 맞물려 있다. 오히려 TPA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TPA 제도가 다시 도입될 때까지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자 한국 -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때

수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20세기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수출지향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과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한 개도국 간의 성장률 격차는 다섯 배를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발전을 이룬 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실용주의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한 중국은 최근 9%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통일 이후 '도이모이' 라는 실용적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베트남도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주목받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높은 무역장벽을 쌓고 수입대체정책을 채택하면서 저성장에 머물렀던 인도도 맘모한 싱 총리의 개방정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산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미 FTA의 효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참여정부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장 없는 분배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과 동시에 소외계층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짜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협상에 기울이는 노력 못지않게 한미 FTA의 분야별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그 이상의 힘을 쏟을 것이다.

한미 FTA, 내일을 위한 선택

얼마 전 발표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에 불과하며,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산업 전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달리 한미 간 산업구조는 산업 간 분업수준이 높고 보완성이 강한 측

면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 내부적인 혁신 노력과 어우러져 국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내일을 위한 선택이며,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협상이란 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타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라면 우리나라도 미국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개방은 오직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 이왕 개방할 것이라면, 한미 FTA를 통해서 세계 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본다.

근거 없는 비판,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반대, 감정적인 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방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다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을 때다.



.....

왜 한미 FTA인가?

1 FTA, 왜 필요한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개방과 경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다.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생존전략’인 것이다. 강자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냉혹한 국제경제 질서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무한경쟁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경쟁체제 하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대외개방을 통해 일류를 지향하는 길밖에 없다. 담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성공할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생존전략

특히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 확대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다. 개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리보다 경쟁우위에 서 있다.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를 비롯한 후발국가들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바짝 추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선·후발국 사이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곧 속도경쟁에서의 탈락을 의미하며, 나라 전체가 주변국가로 전락함을 뜻한다.

이미 20세기는 개방과 경쟁이 가진 위력을 입증한 역사였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발전전략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수입대체에 치중한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수출지향적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해 고도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수출중심 공업화전략은 개방과 경쟁에 기반한 성장전략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1960~80년까지는 외자도입과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했고, 1980년대는 수입수량 규제완화, 관세율 인하 등의 수입자유화, 외국인투자 자유화, 대외경제협력 등을 통해 개방과 경쟁정책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1등 상품을 육성하고, FTA 다변화,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키워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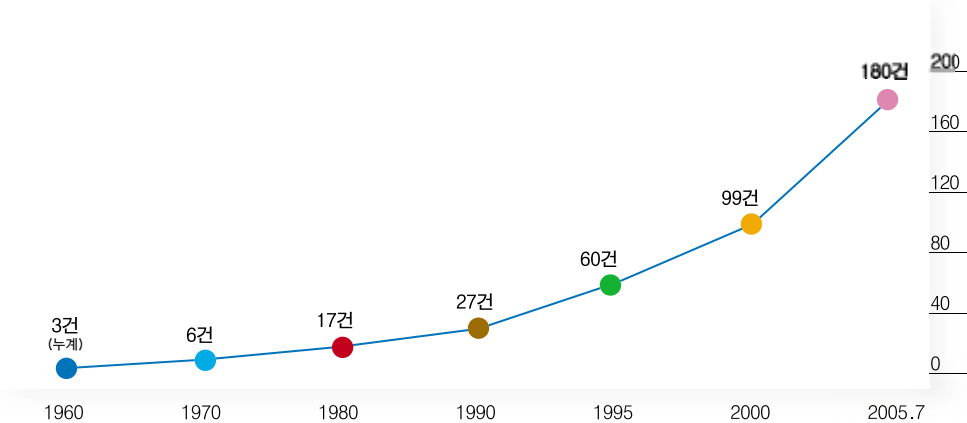
같은 개발도상국일지라도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국가가 폐쇄정책으로 일관한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했다. 19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발도상국가는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폐쇄적 정책을 유지한 국가는 0.7% 성장에 그쳤다.

결국 개방과 경쟁은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과정이다.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개방과 경쟁은 우리 경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생존전략이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

세계는 이미 FTA 체결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FTA 체결을 통한 지역내 개방화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발효 중인 FTA는 18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20건이 1990년대 후반에 이뤄졌으며, 2001년 이후에만 81건이 체결되는 등 그 추세는 갈수록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날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세계 시장이 FTA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도별 FTA 발효 건수



구분	1955-60	1961-70	1971-80	1981-90	1991-95	1996-2000	2001-05.7월
신규	3건	3건	11건	10건	33건	39건	81건
누계	3건	6건	17건	27건	60건	99건	180건

* 출처 : WTO

WTO의 다자간 무역규범하에서 이처럼 블록형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많은 강점을 갖는다는 각국의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WTO 다자협상은 참여한 국가 간 입장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WTO체제하에 안주할 경우 FTA를 체결하지 못한 역외국가는 반사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FTA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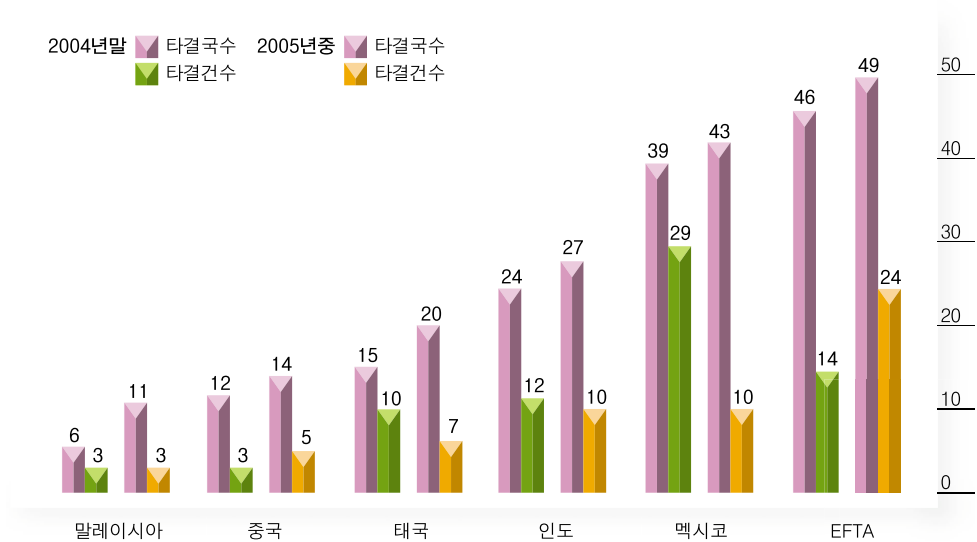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은 이미 FTA의 경쟁장으로 변하고 있다. 2005년 한 해에만 아시아에서 13건, 미주에서 7건, 유럽에서 2건의 FTA가 타결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국, 일본 등에서도 FTA 추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이미 49개국과 체결했다. 다음으로 칠레(46), 멕시코(43), EU(39), 싱가포르(24), 태국(20), 미국(15), 중국(14) 등의 순이다. FTA를 많이 체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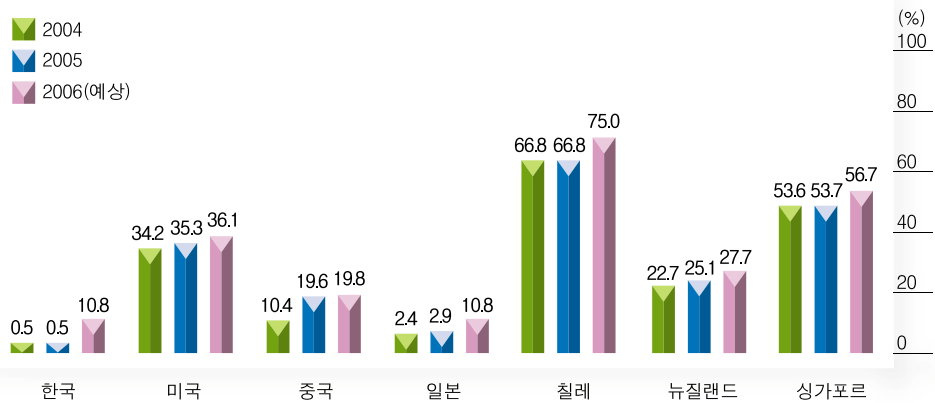
■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대륙	국가	2004년말		2005년중			2005년말 누계	
		타결 건수	국가수	타결 건수	국가수	타결국	타결 건수	국가수
아시아	한국	2	2	1	4	EFTA	3	6
	일본	3	3	2	2	태국, 말레이시아	5	5
	중국	3	12	2	2	파키스탄, 칠레	5	14
	태국	5	18	2	2	일본, 페루	7	20
	인도	7	21	3	6	칠레, 싱가포르, MERCOSUR	10	27
	싱가포르	9	19	3	5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	12	24
미주	미국	9	14	1	1	오만	10	15
	멕시코	10	43	0	0	—	10	43
	칠레	11	41	3	5	중국, 인도, Trans-Pacific SEP	14	46
유럽	EU	29	39	0	0	—	29	39
	EFTA	22	43	2	6	한국, SACU	24	49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rans-Pacific SEP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간 FTA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증가 현황



* 자료 : 무역연구소(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있는 국가일수록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FTA 타결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늘려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발효될 중미 5개국(CAFTA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 중동의 바레인·오만과의 FTA 등을 감안하면 그 교역비중은 35.3%(2005)에서 36.1%(2006)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과의 FTA가 발효될 일본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2.9%(2005)에서 10.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ASEAN과 FTA 체결로 FTA 내 교역비중이 10.4%(2004)에서 19.6%(2005)로 늘었으며, 올해 파키스탄·칠레와 FTA가 성사되면 그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의 경우도 올해 중국·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한 교역비중이 75.0%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은 아직 FTA 후진국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FTA 후진국이며 지각생이다. 2004년 칠레와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건의 FTA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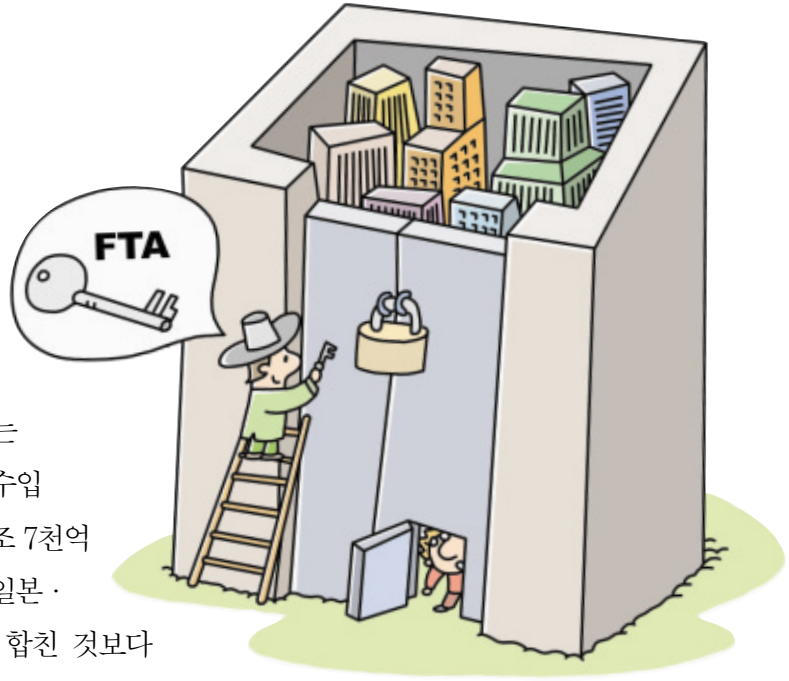
까지 WTO 가입국가들 중에서 FTA 체결이 한 건도 없던 국가는 우리나라와 몽골 뿐이었다. 칠레와 FTA를 추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과도한 지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요 경쟁국들이 잇따라 FTA에 뛰어들고,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 흐름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 더 이상 FTA 추진을 늦추다가는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구조 특성상 세계 교역질서의 새로운 흐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과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칠레·싱가포르 2개국과의 FTA가 발효됐고, 올해 2월 세 번째로 EFTA와 FTA를 타결했다.

아직까지 중국·미국·유럽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맺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 왜 미국인가?



미국은 현재 단일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미국의 수입 시장 규모(2005년 기준)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과 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다. 세계 수입 시장의 점유율(2004년 기준)로 볼 때도 미국은 21.8%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EU(역외 18.3%), 중국(8.0%), 일본(6.5%), 캐나다(4.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과 교류하지 않고는 국제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며,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은 피해 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장

형편이 이러한데도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5년 3.3%에 달하던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05년 2.6%로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1%에서 14.6%로 높아졌다. 2005년 한 해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5.2% 줄어든 반면 중국은 23.8%, 인도는 20.9%, 일본은 6.6% 늘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실적 악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

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을 위해 한미 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해소, 투자유치 확대, 미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 보장 등은 우리 기업이 한미 FTA라는 전용고속도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게 되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세계 최대 시장을 저버리고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는 불가능하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에 대해 하나같이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제적 이익, 산업발전 전략, 농수산물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대 경제권(미국, 일본, ASEAN, 중국, EU) 가운데 최선의 FTA는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선 경제 업그레이드 불가능

FTA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이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세계 일류 지향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세계 최고 시장과 당당히 겨뤄 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이다. 미국과의 FTA는 농업 등 일부 분야의 손실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이며, 해볼 만한 시도이다.

위험 때문에 개방을 미루는 것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변국보다 개방에 뒤처져 아픔을 겪었던 구한말의 실패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전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 노력한다면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하는 계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고민과 숙고 끝에 우리나라가 주도, 전략적으로 선택한 작품이다.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FTA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눈을 돌리게 됐다.

지난해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나라는 25개국에 달했으나, 미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만을 협상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일거에 향상시켜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북아 허브 달성과 경제 시스템 선진화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생산과 고용, 국민후생 증대로 이어져 결국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는 국가신인도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3

한미 FTA 비판론의 문제점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한 이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 중에는 잘못된 근거에 입각한 주장도 적지 않다. 한미 FTA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Q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졸속 추진한다?

A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 선언에 대해 한편에서는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정부가 기울인 노력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최근 수년간 핫이슈는 아니었으나 그동안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실행

하고 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내부적 검토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와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 과제(3년 이상)로 상정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 검토에 앞서 양국 업계 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추진 필요성에 관한 공론화가 이뤄져 왔다. 2000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는 한미 FTA 추진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고, 이후 매 회의 때마다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지난 2003년 1월 회의에서는 BIT(한미 투자협정)/FTA 태스크포스 구성을 의결하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의 한미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구도 꾸준히 이뤄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등 정부발주 연구용역을 포함해 10여 개의 국내 전문가 연구·세미나가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협상 출범 시 예상쟁점에 관해 미리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2005년 총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으며,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한미 간 FTA 사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상쟁점을 미리 파악했다. 또한 1998년 이래 미국과 우리 정부는 개방적·포괄적 경제협력 강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한미 BIT 협상을 진행하면서 FTA 추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개방·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UR 협상을 통한 WTO 가입, OECD 가입,

외환위기 과정에서의 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방과 자유화의 범위를 넓혀 왔다. 또한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허브,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로스쿨 설립,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개혁·자유화 조치들은 한미 FTA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Q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

A 지난 2월 FTA 협상개시 선언은 일부의 문제제기와 달리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FTA 체결 절차규정 제16조에는 '특정국가와 협상개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청회 결과가 가감 없이 보고됐으며,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못했으나 국익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한미 FTA 추진을 의결했다. 비록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중단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협상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협상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단계별로 충분히 설명해 협상의 투명성도 살려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사전연구가 부족하다?

A 각자 입장에 따라 한미 FTA에 관한 사전연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부로서도 사전연구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공동연구

■ 한미 FTA에 대한 연구

정부 영역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 2003.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04. 12, 정인교
	● 미국의 금융산업 업무범위의 규정방식에 관한 법률 검토 - 2005. 1, 김&장
	● 한미 FTA 공청회 자료(2006. 2) 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농촌경제연구원
인하대학교	●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간 FTA 평가(2005. 10, 정인교)
전경련	●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2005. 11)
무역협회	● 일본·미국·중국·ASEAN과의 FTA 효과 검토(2004. 5)
	● 아시아 지역주의와 한미 FTA 전망(2005. 3)
	● 한미 FTA의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및 시사점(2005. 6)
	● 한미 FTA 세미나 자료(2005. 9. 15) - 산업연구원, 인하대, 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2006. 1, 이준규·이홍식
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2006.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저

과제로 선정해 2005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FTA 추진에 관한 각종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에서도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구조조정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피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도 완료되었다.

지금도 정부 내 관계부처와 각종 연구기관이 총동원돼 업종별·품목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를 6월 공식 협상 개시 전에 완료하고 협상안에 반영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Q 미국 일정에 쫓겨 내년 3월까지 타결하려 한다?

A 일부에서는 미국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한에 쫓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가급적 미국측의 TPA 시한에 맞추어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의해 의회로부터 TPA를 행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의 시한이 2007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FTA 협상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한이 종료되면 미국 의회가 직접 협상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 업계의 로비가 심해질 것은 분명하다. 업계의 로비가 본격화되면 협상진전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

미국 행정부의 TPA 연장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과거 미국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종료 후 TPA 발효에 8년이 소요됐고, 미국의 대선 일정이 맞물려 있는 시기적 측면을 감안할 때 내년에 당장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같은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늦은 3월 8일 미국과 FTA를 개시한 말레이시아도 이 일정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듯이, 미국과의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매몰돼 국익을 손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한국 경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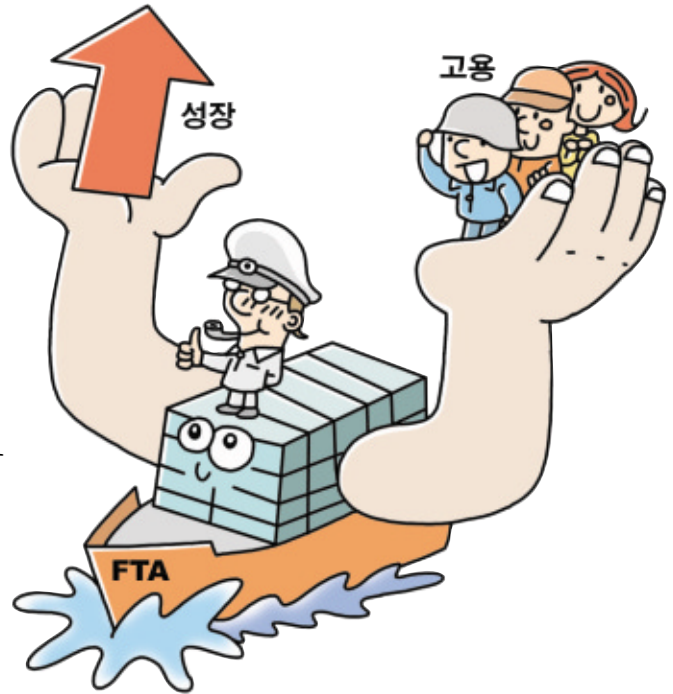
1 대미 수출 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

개방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쇄국정책을 편 결과 근대적 개혁에 실패했다. 19세기 중반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근대국가로 발돋움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해 왔던 중국과 베트남은 개방을 선택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개방을 외면해 온 결과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말았다. 개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우리의 발전전략이다. 미국은 2004년 기준으로 총 GDP가 11조 7천억 달러로 우리의 17배 규모이자 전 세계 수입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세계 최대 시장과의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대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FTA는 이 같은 부진을 만회하고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에게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로 인해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중국 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를 통해 생겨난 직·간접적인 일자리는 53만 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256만 명)의 20%에 달한다(LG경제연구원). 이에 비추어 보건대 한미 FTA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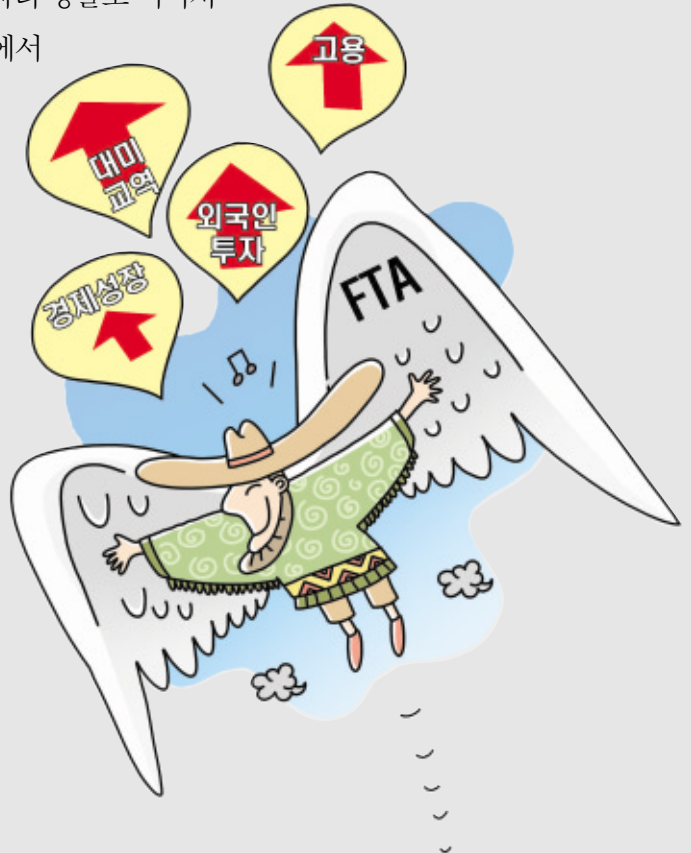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는 분석 모형의 유형과 분석의 전제가 되는 협상결과에 대한 가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무역수지, 외국인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 '동반상승'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중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는 국가가 멕시코이다.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경제성장, 대미 교역, 외국인투자(FDI),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층 향상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NAFTA 체결 이전 평균 2.5%였던 경제성장률은 체결 이후 평균 3.0%로 높아졌고,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은 NAFTA 체결 이전 3.3%에서 2.6%로 낮아졌다. 이 같은 경제적 성과가 NAFTA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NAFTA가 기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 NAFTA 체결 이후의 멕시코 경제

● 경제성장

연도	NAFTA 이전(1984-93)	1995(폐소화 위기)	NAFTA 이후(1994-98)*
성장률	평균 2.5%	△6.2%	평균 3.0%

* 폐소화 위기(1995) 기간 제외시 연평균 5.3% 성장

● 교역

(단위: 억 달러)

구분	대 미국		대 세계	
	1993	2005	1993	2005
수출	430	1,830	520	2,140
수입	450	1,180	650	2,210
무역수지	△20	650	△130	△70

● 외국인투자

*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

구분	NAFTA 이전(1984-93)	NAFTA 이후(1994-2004)
미국 → 멕시코	연평균 27억 달러	연평균 85억 달러
세계 → 멕시코	연평균 40억 달러	연평균 152억 달러

● 고용(실업률)

* 연도별 실업률 추이(국제노동기구 기준)

구분	NAFTA 이전(1993)	외환위기(1995)	NAFTA 이후(1999-2003)
실업률	3.3%	7.5%	평균 2.6%

2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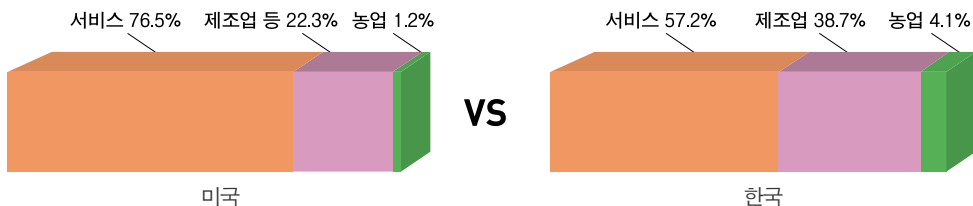
한미 FTA를 통해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그중 선진 외국에 비해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망은 주목할 만하다.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은 아주 많다. 그중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선진국은 제조업이나 농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다.

선진 외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제조업 원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된다. 주요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기반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바로 개방과 경쟁에서

■ 미국 vs 한국 산업구조 비교(2003년 기준, OECD)



뒤쳐졌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이 이뤄지면서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졌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포스코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등장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호기

바둑도 고수와 게임을 하면 실력이 늘게 마련이다. 서비스산업은 개방과 경쟁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년 기준으로 미국(228), 일본(200), 독일(18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100)이다. 문을 닫고 국내 시장에만 안주한 결과이다.

우리는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 경험이 있다.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통해 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토종 유통기업이 급성장했다. 반면 한국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은 일찌감치 뒤쳐졌다.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체질을 강화한 결과 경쟁력도 높아졌던 것이다.

시스템 선진화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FTA 체결(1985)의 가장 큰 성과를 선진적인 경제·사회제도의 조기 도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내의 규범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제도를 투명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애는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경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외신인도 제고, 동북아 허브로 부상할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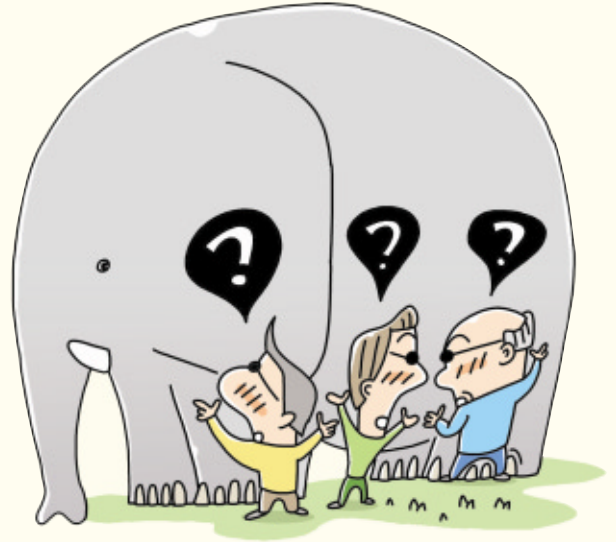
한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무역규범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한 이후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은 'A-'에서 'A'로 한 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최근까지도 'A' (S&P), 'A3' (Moody's), 'A+' (Fitch)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50여 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제까지의 한미동맹이 '안보'에 중심을 둔 관계였다면 이제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한미 FTA는 21세기 경제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확실한 기반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가장 의미있는 한미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는 남북한과 세계 주요국이 각축을 벌이는 지역이다. 한미 FTA는 이같이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안전밸브(safety valv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동북아 물류·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한미 FTA 효과, 과연 과장됐나?



정부가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게 불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해 보자.

Q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므로 문제이다?

A 한미 간 관세율 격차(2004년 평균 관세율 : 한국 11.9%, 미국 : 4.9%)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효과는 한미 양국 간 교역에 한정되

지 않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대 세계 흑자폭이 증가한다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다.

우리나라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고착화되고 있다. 2000~2005년 전체 대일 무역적자는 1,039억 달러이며, 이 중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76.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기술 협력·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계설비·부품·소재 부문에서 무역 전환효과가 발생하여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무역수지 흑자규모보다 교역 자체의 확대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 교역의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 국민의 후생수준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Q 한미 FTA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된다?

A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하나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정책과 한미 FTA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단선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해 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므로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취약부문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FTA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방정책이 가져오는 영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겪어야 될 과정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한미 FTA는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한미 FTA는 섬유·의류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 더욱이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도와줄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수적인데, 한미 FTA는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Q NAFTA 체결 후 멕시코 경제는 악화됐다?

A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거론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미국과 FTA를 맺은 이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멕시코라는 실패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 하는가 하는 의문인 셈이다.

NAFTA를 체결한 이후의 멕시코 경제에 대해 다소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가 다소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은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1995년 폐소화 위기와 함께 경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 내 정치 불안, 경직적인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폐소화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4년 1월 멕시코에서는 치아파스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이어 3월과 9월에는 여당 정치 지도자가 피살되는 등 정치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멕시코의 경제 구조조정은 정부재정과 에너지, 노동시장 분야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이런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됐다. 2000년 7월 71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면서 개혁정책의 추진이 계속 지연됐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간의 NAFTA에 대한 대다수의 해석은 이를 통해 멕시코가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 멕시코 지원을 촉진시켜 폐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이는 NAFTA 체결 이후 대미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실제의 지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31쪽 참조).

Q 미국 경제 위기시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본다?

A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에 NAFTA가 체결된 이후 '동조화 현상'이 커져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이들 나라에도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쌍둥이 적자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생긴다는 얘기이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인 것은 사실이다. 멕시코 전체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9%(2002)에 달할 정도로 대미 의존이 심한 상태이다.

하지만,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이 FTA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근접한데다 멕시코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 의지가 부족해 이미 NAFTA 이전부터 상존해 있던 문제였다. 실제로 멕시코의 NAFTA 이전 대미 수출은 전체의 83%(1993)로 FTA 체결 이후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대미 수입의 경우는 NAFTA 이전 69.3%(1993)에서 이후

62%(2003)로 오히려 줄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사정이 다르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 대미 교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 총교역량(2005년 5,456억 달러) 중 대미 교역량은 720억 달러로 전체의 13% 수준이다.

또한,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은 굳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세계 경제의 자유화 추세 등 세계 경제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FTA가 체결되지 않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미국 경제지표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일본·멕시코·인도 등과도 FTA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역별·국가별 다변화는 한미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미 FTA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A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이다. 한미관계의 강화가 제3국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반드시 다른 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1973년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으로 영국과 유럽대륙과의 관계가 강화됐으나 이것이 영국의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교국들과의 관계를 지속

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한중 통상관계는 최근 수년 동안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이 한중 FTA 체결 등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부는 2003년 8월 작성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중국과의 FTA 추진을 검토해 오고 있다. 2005년 7월부터는 민간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진단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와 경제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중 FTA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Q 한미 FTA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조건도 악화된다?

A 노동계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악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 체계,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여성·고령 근로자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성장잠재력이 큰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FTA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수준은 통상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 FTA 체결이 이런 요소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법상의 근로조건(노동기본권)과 관련해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조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력 우위 부문과 열위 부문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노동 분야에서 미국이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해 우리의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 포함돼 있는 ‘노동협력 장(Chapter)’의 목적은 노동권 보호수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노동권 보호수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보호수준을 국내법에 구현하고 무역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법 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협력 항목과 관련해 미국측에서 우리에게 노동 보호수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행 국내 노동권 보호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유연성 강화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이미 체결한 FTA에서 노동 항목에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국제 노동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왔다. 단결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동법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무역·투자유치를 위한 노동기준 저하금지와 같은 조항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가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FTA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이 일방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Q 미국은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한다?

A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폐기물협약 등 미국에 불리한 환경협약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FTA 내용에 비춰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내 환경 NGO들의 강력한 요구로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별도로 '환경에 관한 장(Chapter)'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역협정과 환경협정의 상호 조화와 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은 NAFTA와 연계하여 체결한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과 유사하게 칠레, 싱가포르, 호주, 바레인, 모로코와 이미 체결한 FTA에 모두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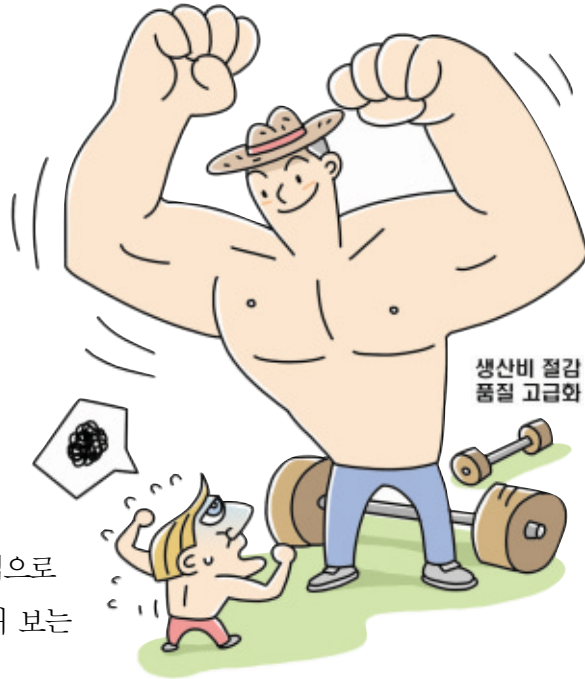
한미 FTA 문안 초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미국은 한미 FTA 내에 '환경에 관한 장'을 제안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이후 협상에서 우리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 분야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1 제조업 -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

제조업은 한미 FTA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큰 업종으로 꼽힌다. 우리의 제조업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의 제조업은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제품, 조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선박 건조량은 2004년 기준으로 세계 1위이다. PDP, TFT-LCD, OLED, 브라운관 등 디스플레이 분야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2004~2005).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제품은 세계 4위이며, 그중 휴대폰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3위이다.

포스코는 세계적 철강업체로 2002년 이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조강생산력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생산량(세계 5위), 석유화학(세계 5위),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도 있어서도 세계 일류수준이다. 이 같은 제조업의 우수한 경쟁력은 한미 FTA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섬유·의류·신발, 대미 수출 대폭 증가 예상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출증가는 섬유와 의류(9.2%), 가죽, 고무 및 신발류(7.0%)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류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 흑자 품목으로 1995년에는 134억 달러, 2000년에는 140억 달러, 지난해에는 잠정 추정치로 7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양말, 티·언더셔츠, 여성용 바지, 운동복 등에서는 관세철폐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됐을 때 섬유·의류 분야에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표와 같다.

이 중 양말산업의 사례를 한번 보자.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양말 수출시

■ 미국의 관세 폐지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KIET) (단위 : 천 달러, %)

품목	미국 관세율*	미국 시장점유율		수출증가율 (2000~2005)	대미 수출액 (2005)
		2000	2005		
모직물	17.5(20.9)	4.6	6.4	2.2	8,775
날염면직물	9.1(8.4)	18.8	35.8	14.2	93,894
편직물	10.4(11.8)	23.8	24.0	0.6	246,164
혼방폴리에스터직물	12.0(12.0)	5.7	17.6	46.6	11,241
양말	11.5(14.0)	11.2	18.1	18.6	249,534
스웨터	11.9(25.3)	4.4	1.6	△15.1	212,300
남성셔츠	14.7(21.1)	5.2	2.2	△12.0	200,958
여성용 바지	14.0(18.6)	2.5	0.7	△19.1	65,965
티·언더셔츠	19.7(19.8)	0.7	0.9	10.0	37,972
운동복	13.1(16.0)	3.2	0.7	△24.5	13,982

주 1) 수출증가율은 2000~2005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임.

2) 중소기업 품목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기업 생산 품목은 제외시켰음.

* ()는 가중평균관세율(2005년)

■ 미국의 국가별 수입실적 및 점유율

(단위: 2005년, 백만 달러, %)

구분	한국	중국	멕시코	엘살바도르	기타	계
금액	250	246	130	108	646	1,380
점유율	18.1	17.8	9.4	7.8	46.9	100

* 대미 양말 수출국 : 19개국 기준(자료 : 무역협회)

■ 경쟁력 수준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가격경쟁력	50	64.3	35.7	39.3
품질경쟁력	50	17.9	71.4	57.1

* 품질경쟁력 : 제품의 완성품질 기준(2005. 6. 니트업계 설문조사)

장이다. 양말은 섬유·의류 분야 총수출의 70%로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산이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떨어지지만 품질을 통해 수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미 FTA로 11.5%의 관세가 없어진다면 대 중국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양말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다 업체의 56%가 대구·경북 지방에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양말산업의 활성화는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역간·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고무제 장갑(14%)이나 가죽 가방, 핸드백(12.6~20%), 신발·모자 등 잡화(11.1%)도 미국의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된다. 특히 농구화·훈련화 등 운동용 신발의 관세는 48%나 된다. 이 역시 한미 FTA로 인해 대폭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로 시장경쟁에서 유리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자동차이다. 미국의 소형 승용차 관세

율은 2.5%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하지만 미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한국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이 관세율이 철폐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 상용차의 경우는 미국 관세율이 25%나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역시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품목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NAFTA를 맺은 이후 일본과 멕시코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역전됐다. 1990년 미국 시장점유율이 32.9%였던 일본은 2003년에는 18.5%로 떨어졌다. 반면 멕시코는 같은 기간 14.1%에서 28.3%로 미국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었다. 미국과 멕시코의 FTA 효과인 셈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1위인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6.5배였던 것이 2003년에는 12.6배로 벌어졌다. 한미 FTA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자동차 업체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 대형부품업체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확대할 경우 이와 연관된 우리 중소부품업체들의 생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는 완성차 업체인 GM뿐만 아니라 Johnson Controls, 비스티온, 리어, TRW 등 미국의 대형부품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생산과 조달 기지를 한국과 중국 중 어디로

■ 한미 간 자동차 품목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

(단위 : 천 달러, %)

HS	품목명	수입	한국 관세율	수출	미국 관세율
870322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86	8	11,776	2.5
870323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5,116	8	6,674,329	2.5
870324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3,000CC 초과	36,035	8	3,343,137	2.5
87042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	427	10	41	25
87043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불꽃점화식)	3,890	10	36	25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수출입실적 및 관세율은 2004년 기준

할 것인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기계 부품 대일 수입의존 완화, 화학제품 투자 확대될 듯

기계 부품은 한미 FTA를 통해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된다. 대일 수입이 대미 수입으로 전환되어 대일 무역수지 적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냉동 공조기계 제품 등에서 수입선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부품·소재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분야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부품·소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경우 부품·소재 수입의 27%가 일본에 집중될 만큼 대일 수입의존 일변도의 수급구조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정밀화학 분야는 한미 FTA를 통해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하면, 정밀화학 분야는 미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평균 50~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외국 유수의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LG생명과학의 경우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사업의 국내 기반 확보를 위해 R&D 투자와 함께 미국의 Chiron, TBC, 독일 Merck, 영국의 SB사 등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 한미 FTA '이후'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철강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차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3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로 8~30%의 관세가 부과돼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5.5%나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당시 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됐다.

미국 바이어 60%, “한국산 수입 확대하겠다”

2006년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60%의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수입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꿀겠다는 응답도 36%나 됐다. 한미 FTA는 대미 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의류, 가죽·고무, 신발, 자동차 등 매우 유리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제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의 관세는 1.9%~2.5%로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철폐돼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다. 섬유 같은 경우는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중국산 섬유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 효과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주장이다. 미국의 평균 관세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호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서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에서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도 상당수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이다. 자동차처럼 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미국 시장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철폐 효과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한미 FTA 지지

한미 FTA는 대기업에만 이익이 되고 중소기업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FTA로 인해 제조업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선적인 해석이다. 한미 FTA는 일부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질 GDP, 후생수준, 교역, 생산과 고용 등 모든 총량 지표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미 FTA로 혜택을 보게 될 고관세 품목인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품목이 많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대책도 이미 강구돼 있다. 지난 4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률은 FTA 피해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경영·기술상담,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과 무역조정 근로자에 대한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2004년 11월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87%, 12월 무역협회 조사에서는 75%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업의 이러한 지지는 한미 FTA의 효과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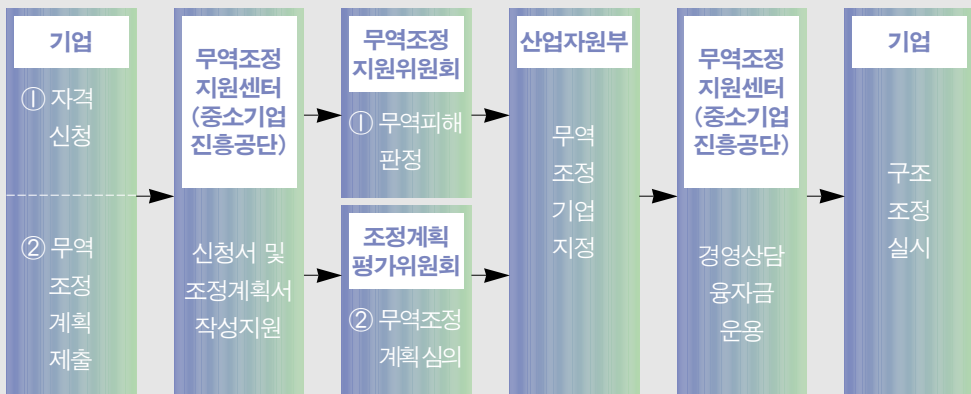
지난 4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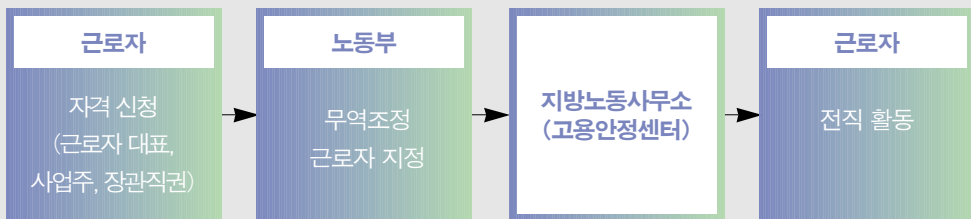
●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원인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기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근로자 : 고용관계법 활용하여 전직 지원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장 : 경제부총리 위원 :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산업단체 추천, 학계 전문가 등 15인
재원조달	일반회계, 기존 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활용
소요 재원규모(10년)	총 2조 8,473억 원(기업 2조 6,400억 원, 근로자 2,073억 원)

● 기업지원 절차



● 근로자 지원 절차



2 농·수·축산업 -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농·수·축산업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가 살 길

축산물 분야는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품목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움으로써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여 나갈 것이다. 돼지고기는 수입선이 이미 다변화되어 있어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늘기보다는 수출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급냉장육은 한우고기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양돈과 양계는 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고,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쇠

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전체적으로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고, 가축 질병의 예방 등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곡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보리·대두 등은 국내산의 가격이나 품질이 미국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종자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자율적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예류의 경우는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핵심이다. 과채류는 오렌지 수입 증가에 따른 일부 피해가 우려되지만 일부 품목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는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농·수·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김치나 라면과 같은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통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해 한국산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복분자주와 같은 민속주, 전통차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아귀 등 수입 증가 예상, 참치 등은 수출 증가 전망

수산물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대 미국 수산물 교역의 무역수지는 6,400만 달러 적자상태이다. 명태살 등의 냉동연육, 아귀·대구 등 냉동수산물이 주요 수입품목이고, 수출품목은 굴통조림·조미김 등 가공품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제5위의 수산물 수입상대국이자 제3위의 수출상대국이기도 하다.

명태나 아귀 등 냉동수산물 수입 증가는 관련 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높은 관세로 묶여 있던 이들 품목이 대거 수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산물 분야에서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품목이 있다.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참치통조림(35%)이나 게살(7.5%)과 같은 품목은 미국 시장 개방에 따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민감품목은 다양한 대응방안과 국내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해 원양어업 등 피해 예상업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세철폐 예외, 이행기간 확보 등의 전략으로 농업 보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 유지작물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중요 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매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관세 인하계획을 제시하되, 쌀 등 식량안보나 농가경제에서 중요한 품목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식량안보 품목이고 우리의 주식이며,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목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협상하였고, 당시에 미국도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동의한 바 있다. 그 외에 짧은 기간 내에 관세철폐가 어려운 민감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도 불리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DDA 협상은 다자간 협상이고 한미 양자간에만 적용될 FTA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협상이다. 양자간 FTA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였다고 해서 이를 다자간 협상에서 그대로 적용한 사례

는 없다. 그러나 DDA 협상과 한미 FTA 협상이 모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쪽 다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FTA 이행지원기금 등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

그동안 정부는 DDA 협상 및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농정을 혁신해 왔다.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5년에는 쌀 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책 없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다양하게 수립해 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119조 원이 투입될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과 연계하여 한미 FTA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 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FTA 이행지원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칠레 FTA 협상이나 쌀 협상에서도 대외 협상만이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협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 감안, 차별화된 협상전략 구사

일부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인용해 농산물 피해액이 8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ITC 보고서는 현재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1995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다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를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해규모를 따져보기에는 전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이다.

물론 한미 FTA로 인해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일단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외없는 FTA 협상은 없다. 과거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에서도 자국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예외조치는 존재했다. 2004년 미국·호주 간의 FTA에서도 설탕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었고, 쇠고기·낙농품·땅콩·연초·목화·포도주 등은 수입쿼터가 설정됐다.

정부는 예상 피해에 대한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개방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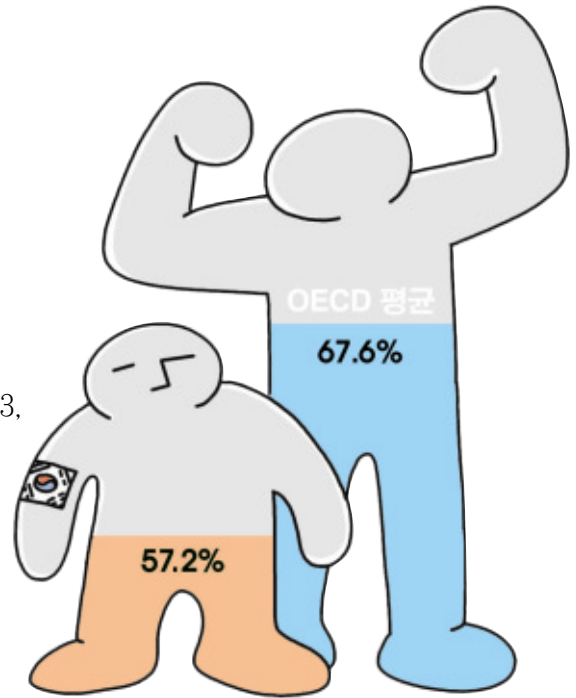


3 서비스업 – 개방과 경쟁으로 생산성 제고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다. 전체 GDP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OECD 평균(2003, 67.6%)보다 낮은 57.2%이고, 고용비중도 63.5%로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업 등 단기 일자리 비중이 큰 것이 약점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비중이 상당히 낮다. 서비스업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 수지와 수출액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5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131억 달러에 달했다. 해외여행, 유학경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적자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2001년 38억 7천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다 2005년까지 4년 사이에 적자폭이 네 배 가량 늘었다.



■ 서비스업 고용 비중 비교

(단위 : 2003,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 랑 스	OECD 평균
서비스업 고용비중	63.5	65.5	77.2	75.1	68.6
도소매, 음식·숙박	26.5	18.0	21.2	16.6	20.0
사업서비스·부동산	7.8	7.5	12.0	14.8	9.9

* 자료 : OECD

■ 서비스 수출 비중 국제비교(OECD)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미국	26.4	26.9	28.4	29.1
OECD 평균	21.0	21.4	22.1	22.1
한국	14.8	16.1	14.8	14.2

* 서비스 수출 비중 = 서비스 수출액/(상품 수출액+서비스 수출액)

■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2000, 한국=100)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제조업	160.8	111.8	92.9	126.7
서비스업	219.2	195.3	180.4	199.9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출액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4.2%로 OECD 평균(22.1%)에 훨씬 못 미치고 미국(29.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미 FTA는 선진화되지 못한 서비스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선 간호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도 전문직 인력의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분야별로 서비스업의 변화를 전망해 보자.

유통업

1996년 시장을 개방했을 당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던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84.7%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니 사정은 전혀 달랐다.

유통업은 2005년 국내총생산의 6.2%, 고용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개

방 이후 급성장했다. 시장 개방 후 대형할인점 수가 크게 늘었고, 국내 업체가 업계 1, 3위,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외국 유통업체가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대형할인점 1위는 토종업체인 이마트이고, 2위는 국내외 기업의 합작회사인 홈플러스, 3위는 국내 업체 롯데마트이다. 이마트는 국내 내수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유통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국내 진출은 국내 고용시장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홈플러스, 월마트 등 외국 유통업체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2000년 9천 명에서 2004년 1만 9천 명으로 커졌다. 이들 대형할인점은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유통시장의 개방이 고용은 물론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금융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동안 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개방에 이르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상당한 정도로 높아졌다.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크게 개선돼 부실자산비율은 2000년 8.94%에서 2004년 1.93%로 크게 줄었다. 개방으로 인한 효과인 셈이다.

한미 FTA는 우리 금융기관과 시장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운용을 위해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돼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시장을 교란시킬까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는 연·기금 확충, 기관투자자 육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태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

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실하게 시행할 것이다. 미국 등의 금융 선진국에서도 건전성 감독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

해외 유학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학 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학수지는 1995년 9억 달러 적자에서 2002년 14억 달러, 2005년 34억 달러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우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육부문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60개국 중 52위였고, 2005년 미국의 「타임」지 대학순위에서 서울대는 세계 93위로 가까스로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다자간·양자간 협상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은 대학과 성인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지속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이 초중등 교육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는 양국 대학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개방의 긍정적 효과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이로 인한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수요 감소와 해외 학생의 국내 유학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교육개방으로 예상되는 우려들 — 질 낮은 교육서비스의 무분별 유입 등 — 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방송·영화

1986년 미국 영화 직배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허용됐을 때 국내의 우려는 대단히 높았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개

방이 이뤄진 후 국내 영화의 점유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영화 직배사의 진출은 국내 배급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4대 영화사(CJ,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롯데시네마)가 국내 배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 영화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개방 당시 0.4%에서 2005년 2.1%로 늘었을 뿐이다. 반면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995년 20.9%에서 2005년 59.1%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 영화의 대일 수출도 2002년 660만 달러에서 2005년 6천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류열풍에서 보듯이 방송 프로그램의 대일 수출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효적인 쿼터 일수는 감경일수를 제외하고 106일로, 73일로의 축소는 절반이 아닌 33일 축소에 해당한다. 한국 영화의 평균상영일은 2001년 143일에서 2004년 170일로 늘어 이미 실효적 상영일(106일)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한국 영화 선호도가 외국 영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이다. 한국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64.3%로 미국 영화(22.5%)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한국 영화는 매년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관람객 수가 연간 8,400만 명에 달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저예산 예술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가 문화의 한 장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영화만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

■ 한국 영화 점유율 및 관람객 수

(단위 : %, 만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영화 점유율	50.1	48.3	53.5	59.3	59.0
한국 영화 관람객 수	4,500	5,100	6,400	8,100	8,400
총 관람객 수	8,900	10,500	12,000	13,500	14,300

* 2005년은 추정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화는 국악이나 한국무용, 미술이나 연극, 출판에 비해 상업성이 매우 강한 장르이다. 극장매출액은 2005년 현재 5,200억 원으로 1998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 영화의 해외수출도 같은 기간 25배 증가해 7,59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영화보다 상업성이 없는 국악, 한국무용, 미술, 연극, 출판 등에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상업성이 강한 영화산업에만 과도한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훌쩍 성장한 한국 영화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일부에서는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한미 FTA로 인하여 우리 영화산업이 몰락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멕시코의 영화산업이 몰락한 것은 멕시코의 경제사정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이다. 멕시코 영화산업의 쇠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한 1994년 이전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1980년대 멕시코 영화 대부분이 질이 낮은 통속물이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영화관 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상태도 불량해 관람객이 대폭 줄었다. 특히 1994년 폐소화 위기 등 경제사정 악화로 영화제작사가 대거 도산했고, 이에 따라 영화산업이 쇠퇴했던 것이다.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화산업도 국가경제의 일부로 국가경제의 발전 없이는 영화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발전 없이 스크린쿼터만으로 영화산업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관광·오락 등 기타 분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는 인도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1991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개방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개방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 인도 전체 수출 대비 소프트웨어 수출의 비중은 1997년 4.9%에서 2003년 21.3%로 네 배 이상 커졌다.

이와 함께 한미 FTA는 화물 수수료 면제 요청 등 통관수수료에서도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수료는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다. 당초 1990년 이후 폐지키로 했지만 재연장되면서 송장(Invoice)당 0.21%(최고 485 달러)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조달시장은 총 1조 1,700억 달러로 이 중 한국기업 참여규모는 미국 기업과 합작 등을 통해 10억 달러 내외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실적 요인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참여에 제약을 받아 왔지만, FTA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출증가율은 증대, 수입증가율은 둔화

FTA 이전까지 칠레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였다. 한·칠레 FTA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한·칠레 교역 동향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1년 (2003.4~04.3)	증가율	발효 후 1년차 (2004.4~05.3)	증가율	발효 후 2년차 (2005.4~06.2)	증가율
수출	524	9.6	830	58.2	1,092	52.6
수입	1,328	63.8	1,925	44.9	2,226	26.6
수지	△803	—	△1,095	—	△1,134	—

● 칠레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백만 달러, %)

국가	2003		2004		2005			연평균(2005/03) 증가율
	금액	점유율(A)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B)	점유율 변동(B-A)	
중국	1,245	7.3	1,847	8.3	2,539	8.5	1.2	42.8
한국	506	3.0	696	3.1	1,076	3.6	0.6	45.8
일본	612	3.6	797	3.6	1,017	3.4	△0.2	28.9
총계	16,969	100.0	22,339	100.0	29,788	100.0		32.5

한국과 칠레 간에 FTA가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증가율은 확대됐지만, 수입증가율은 둔화됐다. 협정 이전까지는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였지만, 발효 이후에는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03년 3.0%였던 점유율은 2004년 3.1%, 2005년 3.6%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타이어, 철강판, 경유,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수출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경유(236.5%)이고, 이어 합성수지(51.1%), 자동차(42%) 등이 대표적 품목으로 떠

● 주요 품목의 대 칠레 수출 (천 달러, %)						
품목	발효 전 1년 (2003.4~04.3)	증가율	발효 후 1년차 (2004.4~05.3)	증가율	발효 후 2년차 (2005.4~06.2)	증가율
기준관세/양허						
자동차	135,150	63.0	213,262	57.8	272,952	42.0
6%/즉시 철폐						
무선통신기기	23,546	△0.6	82,477	250.3	77,516	9.3
6%/즉시 철폐						
컬러 TV	7,474	△38.1	15,512	107.5	13,877	△4.9
6%/즉시 철폐						
철강판	8,249	4.9	11,799	43.1	15,091	35.6
6%/5~13년 철폐						
경유	55,113	△34.1	82,273	49.3	230,591	236.5
6%/5년 철폐						
합성수지	50,830	28.6	87,153	71.5	120,164	51.1
6%/즉시~10년 철폐						
자동차 부품	21,172	1.3	26,323	24.3	26,187	10.5
6%/즉시, 5, 13년 철폐						
타이어	11,650	31.1	14,941	28.2	18,238	31.2
6%/13년 철폐						

오르고 있다.

칠레로부터의 수입품목은 원자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발효 후 1년 11개월간 동괴·동광 등의 수입이 각각 15.9%, 46.9% 늘었다. 대 칠레 수입액 가운데 이 두 품목의 비율은 74.5%(200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동괴의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106.7% 상승할 정도로 크게 올랐다.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도 증가했다. 돼지고기, 포도, 키위, 포도주 등이 증가했지만 국내 농가의 피해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돼지고기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대 세계 수입 자체가 증가했다. 이 중 칠레산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포도의 경우 대 칠레 수입증가율은 대 세계 수입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

● 주요 품목의 대 칠레 수입 추이 (천 달러, %)						
품목 발효 전 관세/양허	발효 전 1년 (2003.4~04.3)	증가율	발효 후 1년차 (2004.4~05.3)	증가율	발효 후 2년차 (2005.4~06.2)	증가율
동괴 5%/7년 철폐	617,727	35.1	892,008	44.4	788,129	△5.3
동광 1%/즉시 철폐	325,661	145.1	497,425	52.7	637,404	42.7
포도주 15%/5년 철폐	3,777	131.7	8,409	174.2	10,071	32.2
돼지고기 26.2%/10년 철폐	36,781	216.4	60,620	64.8	72,510	31.8
포도 45%/10년 철폐	13,663	39.6	15,243	11.6	16,913	55.3
키위 45%/10년 철폐	1,758	29.1	2,885	64.1	7,996	177.2
홍어 35%/10년 철폐	10,519	66.3	7,607	△27.7	7,793	15.9

체 수입 중 칠레산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포도 수입 중 칠레산의 비중은 발효 전 64.6%에서 발효 후 64.9%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 키위는 뉴질랜드산 키위를 칠레산이 대체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칠레산 포도주는 웰빙 열풍으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 칠레산 포도주는 미국산이나 프랑스산을 대체하고 있다. 칠레산 포도주는 국내에서 위스키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대 세계 포도주 수입액은 발효 1년 전 대비 연 1천만 달러 정도 증가했지만, 위스키 수입액은 연 4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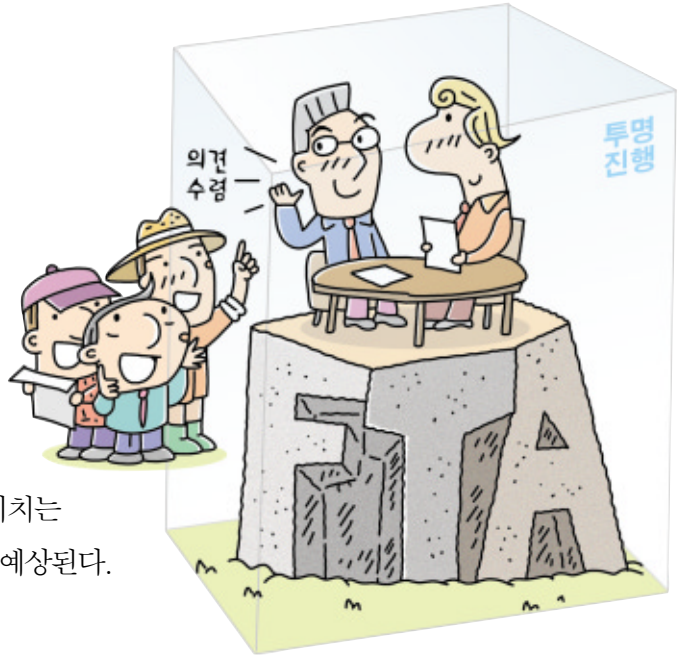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 때, 한·칠레 FTA는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도 등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므로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칠레 FTA 체결 전에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수입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광 등 원자재는 우리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며, 수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FTA의 혜택을 보고 있다.

IV ...한미 FTA,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의견은 수렴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당장 우리 경제 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략적 대응

한미 FTA 발효가 바로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의 민감한 분야는 협상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분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일을 내버려 두고 할 수 없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합리적 해결방식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WTO 협정, 한·칠레 FTA, 쌀 관세화 유예협상 등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왔다. 이번 한미 FTA는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실익이 큰 대비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피해 예상 분야 보완대책 수립·시행

한미 FTA는 크게 보면 국가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세부 분야별로 볼 때는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농업이라고 해도 모든 업종이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가공 농산물의 경우 값싸고 질 좋은 원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 개방의 파고로 인해 타격을 받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협상과정에서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계획이다. 차별화된 협상전략이란 한 업종 내에서도 개방화에 따른 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해 다른 협상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농산물의 경우 쌀 등 식량안보나 농가경제에 영향이 큰 품목은 개방 예외품목으로 추진하고, 당장 관세철폐가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은 개방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국내 수요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급격한 시장과급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수입쿼터 등을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최종적인 협상결과가 가시화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관한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업종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지원조치를 강구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쌀협상 과정에서 추진된 119조 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2006년 중에 수립예정인 '2016년 중소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등과 같은 부문별 중장기 전략도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다시 조정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된다

6월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부는 원만한 협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범정부적 협상단을 구성했다.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총 17개 분과별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마쳤다. 지난 3월 6일 및 4월 17~18일에는 서울 및 워싱턴에서 2차례에 걸쳐 사전준비 협의를 갖고, 협상분과 구성 및 일정 등 협상의 기본 틀에 관해 논의하였다.

5월까지의 협상 주요 쟁점에 관한 우리의 입장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쟁점별 협상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상안에 따른 국내산업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피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등 국내 보완대책 수립도 병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처음으로 1차 협상을 개최한다. 이후 1개월 반~2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주요 분야와 쟁점에 관한 양국 간 입장을 조율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타결에 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말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이며, 하다가도 손해 볼 것 같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절대 손해 보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적 성격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들은 개방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 농업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은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협상은 의견을 널리 수렴하면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업종별 공청회와 간담회, 지방순회 설명회, 온·오프라인 의견 접수, 시민 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협상전략 측면에서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을 빼고는 협상진행 전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 도약전략이다

이백만 | 청와대 홍보수석

“비는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굳이 미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가?”

“역설적이지만 아시아 시장을 계속 잡기 위한 것이다. 분명, 내년쯤 되면 누군지는 몰라도 ‘중국의 비’가 나올 것이다. 그의 실력이 비의 절반밖에 안된다 해도 중화권에서는 그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뉴 키즈 온 더 블록’ 때문에 난리였지만 HOT가 나온 후에는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영미권 보이밴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안주하면 안된다. 미국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성공해야 ‘아시아 공인 1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아시아 시장을 다 먹기 위해 미국 진출이 필수다.”

— 조선일보, 2006년 2월 11일

비,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가다!

아시아의 인기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지난 2월 뉴욕에 데뷔시킨 박진영 JYP엔터

테인먼트 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기가수 출신인 박 대표는 프로듀서로서 비의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한미 FTA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박진영 대표의 말을 들려줍니다. “비는 왜 뉴욕에 갔겠느냐?”고. 박 대표 발언은 “아시아 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간다”로 해석됩니다.

한미 FTA 논란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가?

2. 협상에서 미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3. 한미 FTA의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닌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다!

첫번째 논란에 대한 입장은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비가 뉴욕에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이 많은 것을 풀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런 연예인 비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일본·태국·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반도체·자동차·가전·조선 등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인도·러시아 등에서 선두를 달리는 제품이 많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비의 뉴욕행은 한미 FTA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 시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협상력, 세계 최고 수준

두번째 논란은 한국정부의 협상력입니다. 한국정부의 협상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개방협상의 성격상 그 절차와 내용이 소상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기우입니다.

한국의 통상협상은 운명적으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개가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거세지기 시작한 한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해소해 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앤티덤핑조치(앨범, 컬러TV 등)에 대한 대응, 금융시장 개방, 담배시장 개방, 자동차시장 개방,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199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 한·칠레 FTA 협상….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협상력,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무원들의 협상능력을 믿어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산업자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최고수준의 협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협상에서 완승은 없습니다. 손익을 면밀히 따져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손해나는 협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세번째 논란, 한미 FTA의 효과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도약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비행기를 이륙(Take Off)시키는 전략입니다.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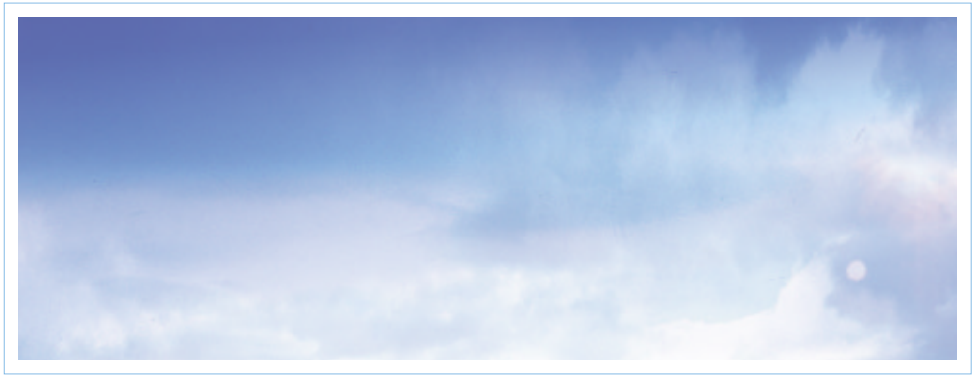
속에서의 강력한 경제협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방적 수출(국내 시장 미개방)에 의한 압축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WTO체제에서는 일방적 수출이 어렵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소위 상호개방전략이지요. 한국은 이 원칙에 따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시장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상호개방전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도약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계산되는 경제적 이득도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들의 계량적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효과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의 핵심입니다.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곳에서 일본 등 경쟁국 상품을 이겨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경쟁국 상품에 비해 1%라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한미 FTA는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월남특수·중동특수·3저효과·중국효과 등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습니까?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를 말한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월남특수·중동특수·3저효과·중국효과 등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습니까?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www.fta.go.kr
<http://fta.daum.net>